

‘탈원전 시대’ 지금부터 대비해야

지난 19일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지켜본 원자력전문가들은 광주·전남도 “고리 1호기에서 교훈을 찾아야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에 따라 오는 2024, 2026년 한빛원전 1·2호기는 폐로(영구정지 후 발전소 폐쇄) 절차를 밟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이 한빛원전 폐

쇄 이후 폐로산업을 비롯한 지역 먹거리 발굴과 유치에 총력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박근혜 정부시절 내놓았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영광 한빛원전 내부에 건립될 예정인 임시 핵폐기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고리 1호기 폐로를 유심히 관철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15조원대 원전해체시장 ‘주목’ 지역먹거리 발굴·육성 총력을

부산 기술센터 유치 등 사활...광주·전남 ‘소극적’ 영광 임시 핵폐기장, 영구 처분장 전략할까 우려

◇영남권, 원전해체시설 유치 사활... 광주·전남은 뒷집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리원전 1호기 해체에는 최소 6400억원의 비용이 든다. 해체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국내 가장 원전이 24개임을 고려하면 최소 15조원의 원전 해체산업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원전 후진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전의 완전 폐로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는 비용, 대피훈련 시설 등 방재계획 관련 비용까지 더하면 원전의 위험성을 제외하더라도 규모는 산정이 불가능할 정도다.

국내 원전 기술이 선진국의 70~80% 수준이라는 지적에도, 원자력산업계가 원전 해체 산업을 가리켜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해야하는 구조다. 하지만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부산 등 영남권과 달리 ‘광주·전남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014년 1400여억원을 들여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원전해체센터) 설립을 추진한 상황에서 부산 등 영남권은 유체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광주·전남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광주전남은 한빛 원전이 있는데다 한수원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력 분사가 있는 만큼 원전 관련 시설 유치 명분이 영남과 견줘 약하지 않다. 중요한 건 시·도지사의 의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빛원전 폐쇄 후 직간접적으로 고용 중인 2000~3000명의 근로자가 빠져나가는 상황을 떠올려보라”면서 “원전 사고를 가정에 대피훈련을 할 수 있는 원자력방재훈련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영광에 임시 핵폐기장 건립 불가피하다면” = 고리원전(부산) 내부에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에 보관 중인 폐연료봉(사용후핵연료)을 보관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핵폐기장)가 오는 2024년까지 건립된다.

원전 해체 방법에는 ‘즉시해체(15년 내의 소오)’와 ‘지연해체(60년)’가 있는데, 고리 1호기의 경우 즉시해체 방식을 택하면서다.

정부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

는 2024년까지 고리원전 발전소 부지 내 임시 핵폐기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조사를 거쳐 영구 핵폐기장 건설 전까지 고리 1호기 물탱크에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를 보관하기 위한 조치다.

한빛원전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한빛 1·2호기 폐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고리 1호기 사례를 주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빛원전 부지에 임시 핵폐기장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시간에 쫓겨 줄수록’로 건설하지 말고 논의를 거쳐 안전하게 건립하고, 영구 처분장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폐연료봉 임시 저장공간 포화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한빛원전 부지 내에는 임시 핵폐기장 건립이 추진됐지만, 영광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핵폐기장 건립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빛원전 내에 2025년까지 임시 핵폐기물저장고를 건립한다”는 박근혜 정부 계획을 뒤집을 만한 복안이 담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광주·전남 지자체 4곳 2040년 소멸 위기

광주 동구·장흥·신안·고흥 광주 광산구·광양시 ‘안정’

광주시 동구 등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4곳이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자료(2인 기준, 인구변화·가임인구변화·고령 인구변화·주민세)에 따르면 오는 2040년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소멸) 위험지역은 광주시 동구를 포함한 장흥·신안·고흥 등 4곳이다. 인구감소 위험지역 차순위 단계인 인구감소 신중검토지역은 곡성·완도·화순·담양·구례·진도·보성·함평 등 8곳이다.

■ 2040년 광주·전남 지자체 인구소멸 예상지

구분	시·군·구
인구감소 안정	광주 광산구, 광양시, 영암군, 해남군, 장성군
인구감소 위험	광주 동구, 장흥군, 신안군, 고흥군

반면 인구 변화가 안정적인 지역은 광주 광산구를 포함한 광양·영암·해남·장성 등 5곳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인구 이동과 출생·사망을 고려한 장래 인구를 추정해 일종의 건강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 자신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구감소 위험지역 차순위 단계인 인구감소 신중검토지역은 곡성·완도·화순·담양·구례·진도·보성·함평 등 8곳이다.

등 네 단계로 분류했다. 이 결과대로하면 광주·전남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22곳은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곳이라는 얘기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4단위 중 안정지역이나 검토지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가 많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위험지역과 신중 검토지역에 들어 있는 지자체가 많아 수도권-비수도권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검토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33.3%를 차지해 4단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정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가 31.8%를 나타내 인구감소 위험과 관련해 비교적 안정적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5·18...아픔보다 희망 말하고 싶다”

영화 ‘택시운전사’ 송강호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故) 이우연 감독의 취재행적을 소재로, 광주에서 촬영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오는 8월 개봉을 앞두고 제작 보고회를 열었다.

“저에게는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너무 아픈 현대사를 다루고 있어서 부담감이 있었죠. 일종의 건강한 부담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저 자신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연배우 송강호가 20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강호는 그러나 “영화 ‘변호인’도 마찬가지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다”면서 “힘들겠지만, 이 이야기의 뜨거움과 열정, 열망을 많은 분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며 결국 출연하게 된 이유를 털어놓았다.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성이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

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송강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상식과 도리에 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필모그래피를 보면 근현대사를 다룬 소재의 영화에 많이 출연했다”면서 “이런 영화를 통해 비극과 아픔을 전하기보다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의형제’, ‘고지전’을 연출한 장훈 감독에 메가폰을 잡았다.

/연합뉴스

靑국가안보실 2차장



남관표(60)

부산 경이고, 서울대 법학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SAIS) 국제정치학과 주 스웨덴 대사, 주 헝가리 대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조정관, 외무고시 12회

과학기술보좌관



문미옥(49)

경남 산청 부산성모여고, 포항공과대 물리학과, 고려대원 물리학과 석·박사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이화여대 WISE 거점센터 연구교수

靑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 문미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남관표(60) 주스웨덴 대사를,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 문미옥(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안보실 2차장 임명은 지난 5일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사퇴한 지 보름만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정의용 실장을 필두로 이상철 1차장, 남관표 2차장 체제를 구축했다.

남관표 2차장은 부산 출신으로, 외교·안보 업무에 정통한 전략 정책 기획통이다. 박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경남 산청 출신의 문미옥 보좌관은 20대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자격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지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문 보좌관은 손꼽히는 여성과학기술인 출신 의원으로, 과학임국 미래를 개척할 책임자”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협약’ 1면서 계속

일자리위원회는 기초협약 등을 토대로 앞으로 지역 내 주요 기업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별, 특별협약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뿌리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확산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화 방침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계기로 가장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과 미래형 자동차 시범도시 지정, 혁신산단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그린산단을 노사상생 혁신단지 특구로 지정하고 일자리 나눔과 확산, 임주기업과 노동자에게 조세·보조금 등 재정 지원과 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정현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고용시장과 노동 생태계 문제에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은 시대적 과제인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의 민주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9호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번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야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흥창정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흑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성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복지, 대로전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복지, 참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복지 참고용지 도로전 990㎡ 5억원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차장 적합)
- 광산구 대신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참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동산 투자의 답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서 현재 가장 HOT PLACE인 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인근 부동산을 강력 추천합니다.

원 료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25㎡, 건물 522㎡, 방 8개 [예산연수입 85백만원] 매가 15억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430㎡, 건물 306㎡, 방 8개 [예산연수입 67백만원] 매가11억원

펜 션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대 5,637㎡, 방 9개, 매가 14,8억 (예산연수입 1억3백만원)

전원주택

- ▶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대 483㎡, 건물 84㎡, 매가 3,7억
- ▶ 서귀포시 대정읍 신광리, 대 406㎡, 건물 67㎡, 매가 3억 [카페, 음식점가능]

토 지

-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 4,664㎡, 계획관리, 매가 26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전 2,774㎡, 계획관리, 매가 12,5억 [다가구주택,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전 3,635㎡, 계획관리, 매가 21,9억 [전원주택지]
-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임야 5,983㎡, 생산관리, 매가 21,7억 (전원주택지)
- ▶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전 2,777㎡, 자연녹지, 매가 10,9억 (단독주택, 펜션부지)
-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전 4,780㎡, 계획관리, 매가 16억 [산방산탄천 인근, 펜션부지]

NAVER **올레탑공인중개사** 검색

26년 은행경력 노하우 **올레탑공인중개사** 기성후·기정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434 ☎064)792-8979